『혁신 옴부즈맨(전문가) 정책발굴(안) 워크시트』
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책발굴(안) 워크 시트

항목	작성 내용 예시 및 안내
단위별 분야	분야: 장애인 사회통합 정책명: 제주형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(활용)에 관한 조례제정
이슈 관련 과제 범위 선정	• 합의현황: 회의에서'2번(장애인데이터플랫폼/조례)'이 최다 선택되어 우선 추진 과제로 확정됨. • 필요성: 장애인분야 데이터 부재로 정책제안–집행–평가의 근거가 취약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. • 법·재정 기반: 조례 없이는 예산편성·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. • 정책대상포괄성: 정보접근성 부족과 사각지대(장애다자녀, 경계선지능등)가 반복 확인되어,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괄적 변수 반영이 필요함.
정책 발굴 관련 환경분석 자료	■ 외부적요인(SWOT) • 강점(Strengths): 대학·연구기관·현장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협력구조 마련 용이. • 약점(Weaknesses): 데이터표준화·품질관리 체계미비, 개인정보규제로 인한 행정간 데이터연계제약, 안정적재원과 전담조직 부재로 운영지속성 취약. • 기회(Opportunities): 국가차원의 디지털전환·AI·빅데이터 정책기조와 연계가능, 대학(특히RISE등)의 데이터분석·AI 연구역량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개발 여건 존재. • 위협(Threats): 인구유출·고령화로 정책수요는 증가하나 추진동력 약화우려, 정치·예산변동성 및조례부결 가능성 등 법적·정치적 리스크 상존. ■ 사회환경분석 • 정보환경: 장애인데이터접근성부족, 특히 장애다자녀·경계선지능 등 사각지대 반복발생→조례제정과 플랫폼 구축으로 격차해소 필요. • 제도·행정환경: 정책근거 데이터부족으로 행정집행어려움, 조례없이는 예산 반영·장기 사업 추진 곤란 → 법제화 필수. • 사회·문화환경: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데이터기반 서비스 욕구 증가. • 위험요인: 조례절차상 재의요구·부결 가능성 등 추진과정의 불확실성 존재.
정책 과제 발굴	■ 효과성 • 정량적효과: 데이터체계화로 정책사각지대 발굴 및 고용·복지·문화서비스 연계 율 향상. • 정성적효과: 당사자 중심정책 설계로 체감도 높은서비스 제공, 사각지대 집단(장애 다자녀, 경계선지능 등)까지 포괄하는 정책 형평성 확보.

	■ 실현가능성 • 기술적: 대학·연구기관의 빅데이터·AI역량 활용 가능. • 제도적: 도의회 조례 경험 축적, 제정절차 현실적 가능. • 재정적: 현재 전담조직·안정적 예산은 부족→조례제정을 통한제도적 기반마련 필요. ■ 시급성 • 즉시성: 데이터부재로정책근거가취약,조례제정시급. • 환경대응: 고령화·인구유출로 정책 수요증가, 데이터미비시 대응 지연 우려. • 리스크예방: 조례부재시 예산·사업 지속 불가→법적·정책적 공백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.
실행계획 수립	■ 1년차: 욕구 조사 및 기반 마련 • 목표: 장애인 당사자와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근거 확보 • 주요활동: - 법밖 당사자(장애다자녀,경계선지능등) 현황 조사 - 장애인·가족·기관대상 욕구조사 실시 -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기반 마련 및 결과보고서 도출 • 성과:정책사각지대현황데이터확보,조례제정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■ 2년차: 조례제정 및 제도기반 구축 • 목표: 조례제정을 통해제도적·재정적 기반 확보 • 주요활동: - 조례제정워크숍개최(당사자, 행정, 관련기관, 보호자등참여) - 조례(안)초안 작성 및 전문가자문 진행 - 도민설명회개최 및 피드백수렴→초안보완 - 조례안도의회 제출 및 심의 절차이행 - 운영기관 설치, 행정·인력 예산확보 • 성과:「장애인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조례」제정, 운영조직및예산기반확 립 ■ 3년차: 데이터플랫폼구축 • 목표: 조례에근거한데이터플랫폼설계·시범운영 • 주요활동: - 플랫폼 기획·설계워킹 그룹 운영(학계·현장·행정·민간전문가참여) - 플랫폼 구축 전문업체 선정 및 개발 착수 - 시범운영 실시(우선분야: 직업재활,복지서비스연계등) - 플랫폼 홍보 및 교육 캠페인 진행 • 성과: 플랫폼시범운영성과 도출, 당사자·기관 활용률 초기확보 ■ 4년차: 성과평가 및 환류 • 목표: 플랫폼 성과점검 및 운영개선 • 주요활동: - KPI기반성과평가(데이터품질,사각지대발굴,서비스매칭률등) - 외부평가단운영 및 조례·운영개선권고안도출 - 활성화이벤트 진행(예:100번째방문자이벤트,당사자체험사례공모등) - 활용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캠페인 연계 • 성과: 플랫폼개선과제도출, 조례운영보완, 이용활성화 ■ 5년차: 안정화 및 정착 • 목표: 플랫폼운영안정화 및 제주형 모델 정착

	• 주요활동: - 조례운영체계 정착(상시운영기관제도화,안정적예산확보) - 도민·당사자 참여확대 프로그램 상시운영 - 전국 우수사례 확산(학술발표·정책보고·언론홍보) • 성과: 제주형 장애인 데이터 플랫폼 제도화 및 전국 확산 가능 모델 구축
성과관리 및 환류	■ 성과지표 • 네트워크 구축 현황: 참여기관수, 정례회의개최횟수 • 현황조사 완료율: 조사대상 대비조사 완료비율(%) • 욕구조사 참여율: 조사참여장애인·보호자·기관수 및 응답률 • 제도밖 당사자 발굴 건수: 기존행정통계에서 누락된 집단 파악 건수 • 장애유형별참여자수: 유형별(지체, 발달, 청각, 시각 등)참여인원 및 비율 ■ 수행주체 • 총괄: 제주특별자치도청(복지정책과) • 연구·분석: RISE사업단, 전문연구기관(복지in연구소) • 현장참여: 장애인당사자및보호자, 관련기관·단체(복지관, 직업재활시설등) • 자문: 학계 및 민간 전문가그룹 ■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• 정기점검: 분기별추진 상황보고(조사진행률,참여자수,예산집행률포함) • 중간성과공유: 중간발표회를 통한 예비결과 공개 및 전문가·당사자 의견수렴 • 최종평가: 최종보고회개최, 성과지표달성도평가 및 차년도 계획반영 ■ 환류메커니즘: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(예:특정집단미포함, 응답률저조)은 즉시 조사설계·방법 보완으로 연결
조례재정의 필요성 및 조례재정(안) 제시	■ 조례재정의 필요성 • 본 사업은 단순한 정책 연구나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라,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'장애인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'에 관한제도적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. • 현재 제주 지역은 장애인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되지 않아, 정책 제 안–집행–평가전 과정에서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. • 조례 없이는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확보, 전담조직설치,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이 불가능하므로, 본사업의 최종성과물이 곧 조례제정임. • 따라서 본 연구·사업 과정은 조례 제정을 위한 단계적 준비(현황조사, 욕구조사, 네 트워크구축, 초안작성, 의견수렴)를거쳐, 도의회심의·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목표로 함.
기대효과 및 성과지표	■ 기대효과 1.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• 장애인 관련 정책 의사결정이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, 데이터 기반 정책 근거 를 마련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. 2.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• 욕구조사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장애 유형·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격차를 줄이고, 실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3. 사업 효율성 강화 • 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, 성과 기반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영역에 재배분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.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

	4.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사회 확산 • 당사자·가족·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안에서 통합사회를 확산할 수 있음. 5. 제주 모델의 확산 가능성 • 주에서 구축한 모델이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며, 장기적으로 국제적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음. ■ 성과지표 1.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(정량적) • 프로그램 운영 횟수: 연간·분기별 진행 횟수 • 참여 규모: 참여 기관 수, 주민·참여자 수 • 정책 반영 건수: 실제 행정·조례로 이어진 건수 • 데이터 활용 건수: 수집된 자료가 정책·서비스에 활용된 횟수 • 장애유형별 참여율: 지체·발달·청각·시각 등 유형별 참여 비율 2.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 (정성적) • 만족도: 참여자·가족이 "도움이 된다"고 답한 비율 • 생활 변화: 정책 덕분에 삶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• 지역 분위기 변화: 주민들의 인식 개선, 포용적 분위기 확산 • 전문가 평가: 정책 활용도가 높다는 외부 평가 • 공동체 효과: 마을·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정도
비고/참고사항	